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개관식 30일 군산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에서 열린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개관식에 김관영 도지사(가운데)와 국주영은 도의장, 김임준 군산시장, 군산지역 대학교 총장, 기타 유관기관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여야, 선거제 개편 전원위 구성

4월 내 단일안 마련 위한 논의 돌입... 위원장에 김영주, 간사에 김상훈·전계수

국회는 30일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 내 단일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돌입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한 뒤, 본회의 산하 직후 전원위를 소집했다. 국회의원 299명이 참여하는 전원위는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열린다. 오는 4월 10일에는 비례대표제, 11일은 지역구 선거제, 12일은 기타 쟁점을 토론한 뒤 13일에 종합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날 국회법에 따라 전원위 위원장을 맡게 된 김영주 국회의장은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마련된 선거제도는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으나 위성 정당 출현을 막지 못했고, 지역구 제도에는 거의 손을 대지 못해 지방소멸과 지역 불균형의 골을 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돼 온 선거제도 개편은 법정기한을 훨씬 넘기고, 총선이 임박해서야 제도가 확정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며 "예측 가능한 제도를 만들기 어려웠고, 오히려 승자독식의 양상

구조와 극한 대립을 야기해 왔다"고 비판했다. 김 부의장은 "우리 국회가 야기한 불신과 물이혜의 정치문화를 스스로 극복해야 한다"며 "선거제도 개편의 대원칙은 여야 합의"라고 강조했다. 야당 간사를 맡은 전계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국회의원들은 국회 구성 방법을 스스로 결정할 권한을 부여받고 있지만 권한에 따른 책임은 다하지 못했다"며 "더 나은 선거제도의 개편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여당 간사를 맡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선거 때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개선할지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며 "인구 100만 명 이상의 특례시에 소선거구제가 아닌 유권자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중대선거구제나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 없는지도 전원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본격 진입하느냐 마느냐가 이번 정치·선거개혁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며 "속의·집중·신속을 운영 원칙으로

살아 집중해서 깊이 토론하고, 4월 안에는 결론을 내자"고 촉구했다. 전원위는 지난 22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결의안에 담긴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형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건을 중심으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세 가지 안 모두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비례성 강화를 위한 대책에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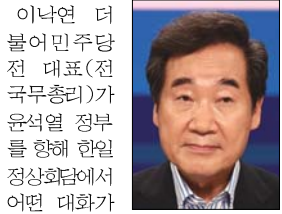
국민의힘이 제안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3~5인으로 하는 중대선거구와, 인구·행정구역·지리여건·교통 등을 고려해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를 함께 두는 복합선거구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은 현행처럼 전국단위로 실시하며 의석 배분 방식은 준연동형에서 병립형으로 바뀐다. 정당 득표율이 비례 30석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져야 할 경우 부족한 만큼을 채워주는 준연동형과 달리, 병립형은 지역구 의석수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

율에 비례해 비례 의석수를 나눠준다. 민주당이 제안한 '개방형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는 한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의원 정수를 4~7인으로 한다. 각 정당이 순위를 정하지 않은 후보자 명부를 제출하면, 유권자가 하나의 정당과 그 정당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지역구 의석 배분은 각 정당의 득표율에 선거구 의석 정수를 곱해 산출하며, 해당 정당이 배분받은 의석 범위 내에서 득표 순위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된다. 비례대표 의석수는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한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내놓은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안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며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비례대표를 6개 권역으로 나눠서 인구 비례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를 배분한 뒤, 권역 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눠준다.

국회 전원위 개최는 지난 2004년 '국군부대의 이라크 전쟁 과전 연장 동의안' 논의 이후 19년 만이다. 여야는 전원위 발인 수 및 발인 시간, 전문위원 등 구체적인 운영사항에 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뉴스시스

“尹 정부, 한일정상회담서 어떤 대화 있었는지 밝혀라”

“무슨 일이 있어 일본 망발 잇따라 나오나”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독도 외교전쟁 태세 점검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한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밝히고, 이후 드러난 일본 망발에 대해 대수 방안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특히 독도 외교전쟁에 임하는 태세를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미국 유학 중인 이 전 대표는 30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3월 16일 한일정상회담과 처음부터 미심쩍었던 두 차례의 만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도대체 무슨 대화가 오갔기에 독도, 역사, 국민건강 등 대한민국이 기울어 도전하는 일본측의 망발이 잇따라 나오는가. 심지어 일본 내각에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독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는데, 그런

또 뭔가”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밝히라 도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일본의 도발에 어떻게 대처하려는가. 4월28일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일관계의 심각한 골절을 어떻게 하려는가. 동맹이더라도, 할 말을 제대로 해야 존중받는다는 사실을 유념하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독도 외교전쟁에 임하는 태세도 점검하라. 2005년 4월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가 이해한 총리에게 발언한 속기록을 참고할 만하다. 한일양국의 태세는 그렇게 달랐다. 나의 그 발언 이후 우리는 처음으로 영문판 국가지도집을 만들었다”고도 했다. 이 전 대표가 공개한 당시 발언은 대부분 국가들이 영문판 국가지도집을 펴내고 있고, 영토나 지명, 국경선 등이 국제적 쟁점이 되는 경우 자국 입장을 일리기 위해 영문판 국가지도집을 유엔 회원국과 관련 이해집단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뉴스시스

“李, 필요할 땐 文 팔고 혁신안 공개”

민주당 일부 권리당원들, '이재명 대표직 정치' 본안소송 추가 제출

더불어민주당 일부 권리당원들이 대장동 개발 및 상남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이 기소한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치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이어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시사유튜브 '백리피링' 진행자인 백광현씨는 30일 오후 3시에 양천구 서 울남부지법에 이 대표 직무정치 본안 소송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에는 백씨를 비롯해 민주당 권리당원 679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28일 백씨 등 권리당원 325명 명의로 직무정치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22일 불구속 기소했다.

민주당 당원 80조는 부정부패 관련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치하도록 규정했으나, 정치타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의 의결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민주당은 80조 예외규정에 따라 기소 당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 대표의 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김봉현 전 스타모델리티 회장으로부터

터 금품 로비를 받은 혐의로 지난달 기소된 기동민 이수진(비례대표) 의원도 함께 예외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백씨 측은 본안 소송에서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의 당직 정치처분 및 당무위 직무정치 예외 의결 무효 등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백씨는 “당원 80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만든 혁신안”이라며 “이 대표와 지도부는 필요할 때는 문 전 대통령을 찾아가고, 팔고 이용하면 서 정작 자기들이 불리할 때는 대통령이 만든 혁신안을 공개는 작태를 취취한다”고 비판했다.

당원 80조는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당대표 시절 김상근-조국 혁신위원회에서 만들어졌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하영재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재석 281표 중 가 160표 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백씨는 “민주당 권리당원으로서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가까스로 부결됐던 일을 상기시킨 셈이다. /뉴스시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민주당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고향사랑기부금제도 시행에 맞춰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도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대안반영)됨에 따라 새로 시작한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활성화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21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자가 본인의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방자치단체를 이를 모아 주민복지 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제도 시행시기인 2023년 1월 1일에 맞춰 적용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다. /정음=김대환 기자

전주시설공단, 4·5 재선거 참여 시민에 '공영주차장 무료'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이 4.5 재보궐선거 투표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혜택을 주기로 했다. 공단은 2023 상반기 재보궐선거 투표일이 투표확인을 제시하면 전주 시 공영주차장을 2시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4월 5일 투표뿐 아니라 31일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참여한 투표인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 주차장은 종합경기장과 한옥마을, 오거리, 실내체육관 동물원 등 공단이 관리하는 총 27개 유료 공영주차장이다.

2시간 무료 이용 혜택은 투표한 날로부터 3개월까지 유효하다. 투표확인증은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 당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영아 기자

전주를 D-6 불법선거 논란... 임정엽·강성희 '사퇴 공방'

임 후보, "진보당 선거운동원 쌀 포대 살포 경찰에 긴급 체포, 철저 수사해야"

진보당 측, "임 후보 주장은 허위사실... 경찰 연행도 영장 없는 불법 주장"

6일 앞으로 다가온 전주를 국회의원 재선거가 불법선거운동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일부 후보간 사퇴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임정엽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30일 긴급성명을 통해 진보당의 불법선거 운동 사실이 명백해 확인되고 있다며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와 함께 강성희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임 후보 선대위에 따르면 임 후보는 전날 선관위 주최 법정 방송토론회에서 진보당 공식선거운동원이 삼천동 일대에서 쌀 포대를 대량으로 살포하다 긴급체포된 사실의 인지여부를 강성희 후보에게 추궁했으며, 이에 대해 강 후보는 "모른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책임지겠다"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임 후보 선대위는 "진보당이 진보

의 탈을 쓰고 불법 타락선거를 자행한 것은 진보당을 경계해준 전주시민의 뒤통수에 비수를 쬐는 것"이라며 "진보당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대표 행위 범죄에 정치적 책임을 지고 시민 앞에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선대위는 특히 "전날 해남 농민이 전주 삼천동 웃가게에서 쌀 판매 관측 활동을 벌였다는 변명에 이연실색할 수 밖에 없다. 전주시민을 얼마나 바보로 알았으면 이런 해명을 하는지 그저 경악스러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진보당 선거대책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임정엽 후보가 방송토론회에서 강성희 후보 선거운동원이 대량으로 금품을 살포했다는 거짓 주장을 한 것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라며 즉각 반박했다.

진보당 측은 "명백히 허위사실을 유포한 임정엽 후보는 법적 그리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변호인 접견조차 가로막은 경찰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진보당 선대부 측은 곧 강성희 후보의 공식 입장이 나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식선거운동 위반 혐의로 전주를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A후보 측 선거운동원 2명을 29일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일부 유권자들에게 농산물을 전달한 뒤 특정 후보 지지자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다른 유권자들에게도 농산물을 살포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뉴스시스

임승식 도의원, 전북물포럼 킥오프 회의 참석



전북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 1)은 지난 29일 지역 물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포럼형 기구인 '전북물포럼 킥오프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첫 포럼으로 중점적으로 논의해야 할 안건을 공유하고자 추진했다. /김재훈 기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근거 마련

이정린 도의원 발의 조례 제정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전북도의회 이정린 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법률적 정의는 없지만 의학계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지능지수 70~85 사이에 해당하는 자를 경계선지능인으로 보고 있으나 이들이 장애의 범주에 속하지 않아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전혀 지원받지 못한다"며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평생교육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 조례는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경계



선지능인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 수립과 시행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 있다. 이정린 의원은 "현재 국회에서 이들을 위한 지원 필요성을 인지하고, 경계선지능인법의 추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조례를 통해 전북이 선제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지능인의 삶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전라북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2024년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에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평생교육 계획을 수립 실행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